

# 전북도 먹거리 종합전략 푸드플랜 실행 근거 마련

### 국주영은 도의원, '먹거리 기본 조례안' 공동 발의 5년마다 계획 수립·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포함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과 강용구 의원(남원·더불어민주당), 박희자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한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전북도 푸드플랜이 수립된 이후 국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2차례 공청회를 실시해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듣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주 의원은 "먹거리 기본 조례는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



비를 통해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해 먹거리 보장 정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정 조례안에는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 민간 위원 등 3명의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된 먹거리 위원회를 통해 먹거리 정책 방향 및 종합계획·시행계획, 먹거리 정책 협력사업 추진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를 각각 규정해 도민의 먹

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전라북도에도 교육감이 건립할 협조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북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먹거리 정책책임관을 지정해 부서 간 먹거리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등의 실행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덧붙여 도민이 주도해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민들로 구성된 먹거리 속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주영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먹거리 종합전략인 푸드플랜의 실행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은 물론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돼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맛의 고장서 김치 관련조례 꼭 필요'

### 김이재 도의원 개최 '도 김치산업 진흥조례' 제정 간담회서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이 8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맛과 멋의 고장이 될 수 있는 전북도가 우리민족 고유음식이라 할 수 있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 계승·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내 김치산업을 육성하고,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례제정

을 앞두고 김치전문가, 김치업체 대표,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김이재 의원의 '전라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초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내 김치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김치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김치재료 가공시설의 신설 및 증설, 김치 가공시설, 저온저장시설 확충을 비롯해 기반조성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내 김치의 국제의 시장·관료개척을 위한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이재 의원은 "전북도 김치가 각종 경연대회에서 최고의 맛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김치관련 산업은 열악한 상황이다"며 "오늘 간담회가 전북도 김치관련 산업을 육성시켜 진흥시키는 사발점이 되도록 김치업체·명인·전북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이 8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정부 창업촉진 우대 지원에 여성·장애인 포함

###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여성·장애인 창업 지원법'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 창업촉진사업의 우대 지원대상에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최근 여성과 장애인의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이번 법개정이 창업시장에서의 성비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신영대 의원은 중소기업법률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서 여성창업기업의 선정률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창업사



업화 지원사업에서 여성 예비창업자가 선정된 비율은 27.8%, 3년 이내 초기 여성창업자가 선정된 비율은 16%, 3년 이상 7년 이내 창업도약기업 중 여성기업이 선정된 비율은 10.7%에 불과했다.

또한, 2019 장애인기업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장애인 창업자의 창업자금 출처의 대부분이 본인자금(76.7%)이나 민간금융(21.5%)인 반면, 정부 정책자금을 창업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는 단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대 의원은 "같은 조사에서 장애인 창업자가 창업준비과정 애로사항 1순위로 자금조달(56.9%)을 뽑은 것과

비교했을 때, 정부의 장애인 창업 지원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여성·장애인 창업 기업의 창업자금 및 경영자금 보조,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창업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는 청년 창업기업만이 우대대상이었다. 특히 최근 결혼과 출생, 육아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 창업에 도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창업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여성과 장애인의 활발한 창업이 이뤄질지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외 계층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윤준병 의원,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법'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8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대학 신입생 증원율을 제고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경쟁력 및 지원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예산 일자리, 산업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여러 정부부처 간의 참여와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현재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운



영되고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중장기 추진계획, 지원

확보 등의 사항들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증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이 분명치 않아 지방대학 지원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현재 교육부 장관 소속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증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호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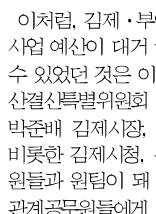
## 김제·부안 현안 해결 '착착'

### 이원택 의원, 총 28개 사업 예산 748억 내년 예산 반영 "확정된 사업 신속 추진... 지역 위해 더욱 최선 다할 것"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이 김제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현업추진사업, 김제 전 기특장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직소천 캠퍼리 과정활동장 조성 사업 등 김제·부안의 각종 현안 사업 예산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내년 예산안에 최종 반영시키며, 속도감 있게 해결해 냈다.

2022년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원택 의원은 김제시·부안군의 28개 주요 현안 사업 예산 748억 원(총사업비 1조4,119억 원)이 내년도 국가 예산에 최종 확정·반영됐고, 이중 당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김제·부안의 11개 사업을 포함 13개 사업 예산 219억 원을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증액·반영시켰다고 밝혔다.

실제, 이의원이 이번에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한 13개 사업(총사업비 4,897억 원)은 김제시·부안군이 오랜 기간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던 사업들이다.



이처럼, 김제·부안과 새만금의 주요 사업 예산이 대거 국가 예산에 확정될 수 있었던 것은 이원택 의원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김제시장, 부안군청 관계 공무원들과 원팀이 돼 각 부처 장관 및 관계공무원들에게 김제·부안의 현안 사업들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 기대 효과 등을 수없이 설명·설득해 이뤄낸 성과이다.

특히, 국회 예산심의 기간에는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기재부 담당 국장·과장 등에게도 하루에도 수차례씩 주요 사업들의 예산 반영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해왔기 때문이다.

이원택 의원은 "김제·부안 부안·김제의 동반성장과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만큼, 이번 예산이 확정된 사업들은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아쉽게도 이번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은 내년에 예산안에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제·부안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김제·부안, 부안·김제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이용호 국회입당 지역 내 비난 잇따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난 7일 국민입당에 입당한 것과 관련해 지역 내에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변절자 이용호는 더 이상 남원임실순창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가 국민당을 선택하며 늘어놓은 변은 모두 궤변일 뿐"이라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지역민을 저버린 이용호 의원의 추악한 민낯이 민천하에 드러난 만큼,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지역주민에게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고 강력 비판했다.


기본국가전북연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용호 의원의 행보는 지역주민과 전북 도민의 민심을 배반한 기회주의적 처신"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당도 기독교에 안주하지 말고 이재명 후보가 밝힌 대 사면의 원칙에 따라 민주개혁세력 대통합을 위해 열린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주교 남원·임실·순창 지역 6개 성당 신부들 비롯해 사단법인 인권누리 등도 "광주 학살자 전두환을 옹호하는 윤석열 후보와 손을 맞잡은 것은 임실순창 남원 지역구 주민들에 씻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임기 중이라도 공약을 저버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국회의원을 심판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낀다"며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